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3. 3. Vol. 9

■ 농정이슈

정부, 북한에 구제역 피해 지원 제의

■ 정책브리핑

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

■ 연구지원

2013년 축종별 등급판정통계분석 결과

■ 특별기획

2014 미국 농업법(Farm Bill)

농정이슈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<정부, 북한에 구제역 피해 지원 제의>

- **[북한, 구제역 발생]** 평양과 황해북도 중화군 돼지에서 발생*, ' 11.4월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3년 만에 **구제역 재발(' 14.1.8일)**
 - ※ 조선중앙통신(2.21일)에 따르면 현재 3,200여 마리 돼지가 O형 구제역에 감염, 그 중 360여 마리 폐사, 2,900여 마리 도살되는 등 경제적 피해 발생
 - ※ (2.19일) 북한,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구제역 발생 통보 → (2.20일)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, 한국에 북한 구제역 발생 통보
- **[정부,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관련 실무접촉 제의, 2.24일]** 북한 지역 내 구제역 확산 차단 및 퇴치 지원하기 위해 북한 측에 지원의사와 함께 관련 논의 위한 실무접촉 제안(2.24일), 북한 동의하면 소독약백신 등 지원할 방침
 - ※ 정부, '07.3월 북한 구제역 발생 시 약품·장비 등 26억 원 어치 지원한 바 있음.
 - (기대효과) 남북 농업협력 활기
- **[북한, 식량농업기구(FAO)에 구제역 방역 및 퇴치 지원 요청]** 우리나라 정부 지원 제안엔 아직 답변이 없는 가운데 FAO에 지원 요청
 - ※ 미국 자유아시아방송(RFA)에 따르면, (2.23일) 북한이 구제역 방역 및 퇴치 지원 FAO에 요청 → (2.24일)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정부·FAO 관계자 참석해 대책회의 진행
 - **(FAO, 실사단 파견)**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구제역 피해 지역에 실사단 파견 예정
 - ※ FAO, '12년 초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제공한 8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구제역 예방 백신 제공한 바 있음.

자료 : MBN·SBS·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4.) / 경향신문(2014.2.25.) / 농민신문·연합뉴스·KBS(2014.2.26.) / NEWSis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헤럴드경제(2014.2.27.)

참조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북한,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검역방역조치 강화」(2014.2.20.), 통일부 정책소식_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관련 실무접촉 제의(2014.2.24.)

□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

- **[신고현황]** AI 신고농가 32곳, 25곳 양성, 6곳 음성, 1곳 검사 중(2.26일 현재)
 - (살처분현황) 완료: 살처분 가금류 농장 273개, 565만3,000수 / 계획: 6농가, 31만8,000수(2.25일 오전 6시 현재)
 - (야생철새) 야생철새 314건 검사, 양성 29건, 음성 255건(2.25일 현재)
 자료 : 매일경제서울신문·아시아경제연합뉴스·파이낸셜투데이·한겨레한국경제(2014.2.24.) / 경향신문NEWSis·아시아경제(2014.2.26.) / 서울경제연합뉴스·YTN한국경제(2014.2.27.) / 농민신문(2014.2.28.)
 참조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」(2014.2.25.), 「전남 영광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」(2014.2.26.)
- **[정부대응]** 근본적체계적 AI 방역대책 마련 및 강력한 선제적 조치
 - (살처분 보상금 최종 산정) 마리당 산란용 종계 3만1,540원, 육용 종계 2만5,688원, 토종닭 종계 2만8,815원, 산란계 1만3,587원, 종오리 4만6,252원
 - (오리 부화장 및 농장 관리 강화) 2.23일부터 전국 56개 오리 부화장에 1대 1일 전담인력 배치 및 중점 점검, 전국 오리농장 1천여개소 AI 정밀검사 및 방역의무 준수여부 점검
 - (철새위험지역 신규농장 허가제한, 기존농장 이주 지원)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제한, 기존 농장의 경우 이주할 때 인센티브 지원, '14년 3,817억 원 투입키로 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'가금시설 리모델링'에 집중 투자
 - (살처분보상금 '삼진 아웃제' 도입) AI 되풀이되는 농가에 대해 처음 발생하면 보상금 20%, 2차 발생 40%, 3차 발생 80% 대폭 삭감
 - (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) 공장식 밀식사육으로 가축의 면역력 약해져 전염병 견디지 못한다는 지적 수용해 적정사육밀도 준수하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
 - (충북 음성, AI 수평전파***정황, 살처분 강화**) 음성, 발병농가 반경 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 32곳 중 무려 26곳 AI 감염돼 수평전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**발병농가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역학농가*까지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통보**
 ※ 발병지의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
 ※※ 발병농가를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자주 왕래해 역학적으로 연결된 농가
 - (박대통령, AI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강조) 2014년 농식품부 업무보고(2.24일)에서 AI 관련해 철새 도래지 인근 닭·오리 농장 허가조건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, 환경친화적 축산 강화 등, 또한 닭고기·오리고기 소비 촉진 독려
 자료 : 내일신문·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·헤럴드경제(2014.2.24.) / NEWSis·매일경제·세계일보·이데일리(2014.2.25.) / 농민신문·내일신문·서울경제·YTN·SBS·파이낸셜뉴스(2014.2.26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7.) / 농민신문(2014.2.28.)
 참조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」(2014.2.25.), 「박근혜정부 2년차 국정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「3대 전략목표, 9대 정책과제」를 밀도 있게 추진」(2014.2.24.), 「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」(2014.2.18.)
- **[AI 여파]** AI 장기화로 인해 강원·경북 제외한 **지자체 살처분 보상비 예산부족, 축산농가 축산물 판매 부진과 가축 입식 지연** 등에 따른 **경제적 어려움 호소**, 정부의 **예방적 살처분 범위 입장 모호로 지자체 혼란**, 시·도 소비촉진 운동
 자료 : 농민신문(2014.2.24.) / 농민신문(2014.2.26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7.) / 축산신문(2014.2.28.)

□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협상 합의 없이 종료...5월 재협상 가능성

- **[TPP 협상(2.22~25일 간) 합의 없이 마무리]** 일부 공통 분야에 대해 합의했으나 **시장 접근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 남아** 최종 합의 도출 못해 **5월* 다시 장관급 회담** 여는 방안 검토
 - ※ 5월 중국 칭다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통상장관 회담 개최될 예정 이어서 두 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 내재
 - **[관세철폐 기간 연장 예외 허용]** 일률적 관세철폐 대신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논의
 - (미국·일본, 관세 철폐 대상기간 **농고 입장차 커**) 미국과 일본은 농산물,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에 관해 큰 입장차 보여 이번 TPP 협상 타결 어려울 것으로 예상
 ※ (일본) 쌀, 보리, 소·돼지고기, 유제품, 설탕 등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예외 인정 요구 ↔ (미국)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주장
 - (농산물 외에 **지적재산권, 공기업 부문 개방 등 이견**) 한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은 농산물 외에 지적재산권, 공기업 부문 개방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부 이견
 자료 : 서울경제(2014.2.24.) / 아주경제KBS(2014.2.25.) / NEWSis·세계파이낸스·아주경제SBS연합뉴스·이투데이·한국일보·헤럴드경제(2014.2.26.) / 한겨레(2014.2.27.) / 농민신문(2014.2.28.)
- 〈산업통상자원부, TPP 원체약국으로 참여 검토〉
- **[TPP 원체약국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]** 우리나라가 향후 **TPP 참여 결정하는 경우 TPP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**한다는 의미(2.25일)
 - ※ TPP 참여 여부: ①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과, ②'14.3월 말 예정된 TPP 분야별/산업별 심층영향분석 결과, ③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결정
 - **[제2차 예비 양자협의 4월 말 마무리]** 12개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*을 제외한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11개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 완료, **3월 중순 이후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추진**해 4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
 - ※ 일본과 처음으로 3.6일 도쿄에서 예비 양자협의 개최 예정
 - 한편, **한-인도네시아 CEPA(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제7차 협상(2.25~28일, 서울)** 개최
 자료 : 아주경제·YTN·SBS·KBS·한국경제TV(2014.2.27.) / 경향신문·news1·매일경제·머니투데이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투데이·파이낸셜뉴스(2014.2.28.)
 참고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우리의 TPP 참여 문제 관련 추가설명」(2014.2.27.), 「한-인도 CEPA 제7차 공식협상 개최」(2014.2.25.)

농정이슈

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, FTA 시장규모 55% → 71% 확대

- [2014 업무계획 보고] 산업통상자원부, FTA-WTO 협상 및 TPP 논의에 적극 대응, 국내대책 준비(2.24일)
- 아태 경제통합 핵심축 기능 확보로 FTA 시장비중 55% → 71% , FTA 교역액 비중 36% → 61% 확대

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

구 분	주 요 내 용
양자 FTA	• 중국, 영연방 3개국, 인니, 베트남 등 중점 추진
광역 FTA	• 예비 양자협의, 심층영향분석(3월), 공청회를 통해 TPP 참여여부 결정
W T O	•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준비, ITA 등 협상 대응, DDA 작업계획 마련

- [필요성] 한·중 FTA 등의 추진에 따라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우려 존재, 아태 지역에서 TPP, RCEP* 등 지역통합형 FTA 논의 가속화
 - ※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: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대만, 브루나이,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 + 한국, 일본, 중국, 호주, 인도, 뉴질랜드 이상 6개국 참여
- [대응방향] ' 13.6월 마련한 신통상로드맵의 핵심축(linchpin)* 전략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FTA 추진
 - ※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시장과 미국 중심의 한태평양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한국이 맡기 위해 양쪽의 FTA 동시 추진
- [현장 목소리 반영해 통상 현안 대응] i) 해외 무역장벽 사례 발굴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대응*, ii) 업종별 통상산업포럼·지역 설명회 등 업계 소통·의견수렴 활성화, 보완대책 내실화**, iii) 협상과 연계한 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(6월),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등 선제적 국내대책 추진***
 - ※ 수입규제 국내대응반(수시), 비관세장벽 협의회(3월, 9월),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(12월) 등
 - ※ ※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분과회의(1~3월)·전체 회의(3월) 등
 - ※ ※ ※ 한·중 FTA 2단계 협상 단계부터 부처합동 「한·중 FTA 준비과제」 마련, 새로운 지원대책과 제도개선 추진하여 시장개방에 대비

자료 : news1·데일리안·머니투데이·서울파이낸스·아시아경제·아주경제·이투데이·조선일보·파이낸셜 뉴스·헤럴드경제(2014.2.25.) / 농민신문(2014.2.26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7.)

참조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「‘기업에 더 큰 시장을,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’ -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」(2014.2.24.)

농정이슈

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작(3.1~3.31일까지)

- [친환경농업직불금* 신청 접수] 농식품부,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업인 대상**으로 3.1~3.30일까지 신청 접수
 - ※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위해 보조금 지급('14년 예산 270억 원)
 - ※ ※ 2014년부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(농업인 및 농업법인)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- (지급한도) 농가(경영체) 당 0.1~5.0ha
- (지급단가) 논: 유기 600천 원/ha, 무농약 400, 저농약 217 / 밭: 유기 1,200천 원/ha, 무농약 1,000, 저농약 524
- (지급기간) 무농약·저농약 3회, 유기 5회
 - ※ '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자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
- (제외대상)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 - ※ 2010~2012년 간 1,200억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했으나 이 중 18.7%(224억 9,900만 원)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농가 미지급
- [향후계획] 유기농 직불금의 영구화, 작물별 직불금 차등 지급 등 친환경농업 직불금 개편 방안 조만간 내놓을 계획

자료 : 농민신문(2014.2.26.) / 농수축산신문·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7.)

참조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작 - 사업신청 기간,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」(2014.2.24.)

벼·콩 품종 인식 바코드 시스템 개발

- [벼·콩 유전체 신분증 제작] 농진청, 2.20일,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기술을 이용해 벼·콩 품종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판별하는 '품종인식 코드화 시스템' 개발*, 국내외 특허출원(PCT/KR2013/009731, 10-2013-0014326)
 - ※ 농진청에서 개발한 벼 285, 콩 147 품종의 특성을 바코드로 나타내고, 이를 비교해 품종을 판별하는 기술, 벼·콩의 염색체 내 품종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마커(벼 112개, 콩 202개) 선발, 그 결과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바코드화 한 뒤 품종 간 차이를 판별하는 방식

농정이슈

- **(궁극적 목표)** 품종의 권리보호와 유전자원의 관리 및 시스템을 육종기술에 활용, 국산품종과 비슷한 저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사전 방지
- **(장점)** 유전적으로 99% 유사한 품종까지도 품종 간 차이 정확하게 판별, 기존 분석에 비해 마커 제작비용 1/10, 판별 시간 1/3 이상 절약

자료 : 연합뉴스-한국농어민신문(2014.2.24.) / 농민신문-원예산업신문(2014.2.26.)

중국, 반대 무릅쓰고 GMO 연구·개발 박차

- **[중국, GMO 연구개발(R&D) 추진 가속화*]** 중국 내에서 유전자변형작물(GMO)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올해도 GMO 연구개발(R&D) 추진
 - ※ 중국 농업부 관공실은 '2014년 농업과학기술교육 및 환경보호에너지 사업 요점'에서 "유전자변형 중대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" 발표
 - ※ ※ 유전자변형에 의한 우수 목화, 항(抗)제초제 콩, 고품질 젓소 등 중대한 신품종 재배 가속화
- **[중국 GMO 재배 면적, 420만ha(헥타르)]**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(ISAAA) 2013년 세계의 유전자변형(GM) 기술 상업화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인도, 캐나다에 이어 6위 차지
 - ※ 주요 재배작물: 면, 목화, 백양나무, 토마토, 피망
- **(GMO 상당한 비중 차지)** 중국에서 생산되는 면의 70%가 GMO, 중국에서 소비되는 콩은 대부분 수입되고 수입물량 대부분 GMO
- **(중국 사료작물 상업화 가능성)** ISAAA 보고서는 GM 옥수수 등 사료작물은 앞으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상업화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
 - ※ 중국 정부, 2009년 GM 옥수수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발급해줬지만 GMO에 대한 불안 확산 및 반대의견 강해 상업적인 재배에 필요한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

자료 : 아시아경제(2014.2.27.)

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2.24.)

개요

- **[2014년 업무계획 보고]** 농식품부, '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,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' 주제로 2014년 업무계획 보고(2.24일)
- **(농정 3대 축 중심) 경쟁력, 소득복지, 수급·유통 중심으로** 100대 과제 중 '14년 중점 추진할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 선정추진'

2014년 농식품부 3대 전략목표 및 9개 핵심과제

국정과제	실천계획(100대 과제) 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)	여건	3대전략 9대 핵심과제
12. 미래성장산업화	ICT·BT 융합 지역농업 조직화 농업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	급속한 개방화 • 쌀관세화-FTA • 농업피해 우려 • 수출시장 확대 기회	경쟁력 제고 ① 농업의 6차산업화 ② ICT·BT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③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
31. 농가 소득증대	농가 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적 경영위험관리 공동체 경영 및 소득원 창출 직불제 확충, 에너지물류농업	기후변화·고령화 • 도농간 소득격차 지속 • 농촌 복지수요 증가	소득·복지 향상 ④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⑥ 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
52. 복지농촌 건설	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농촌활력 창출	소비패턴 변화 • 안전·고품질 농식품 • 소포장·통신판매 선호	수급·유통 개선 ⑦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⑨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
39. 식량수급체계 구축	농업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민영양 및 식생활 교육		
32. 유통구조 개선			

- **[추진목적]**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하면서 국정 2년차 국정 과제의 **가시적인 성과 창출확산***
 - ※ 지난해 농식품분야 5대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위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(‘13~’17)」 수립(‘13.10): ① 농림축산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, ② 농가 소득 증대, ③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, ④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, 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건설

☞ 정책브리핑

- [추진배경] 2014년은 영연방3개국 FTA, 한·중 FTA, 쌀 관세화 유예 종료, TPP 등 농업통상 현안이 집중되면서 농업계 불안감 지속

- ※ 위기...농산물 수입 증가, 농업성장 정체, 농기자재·유류비·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, 자연재해/가축질병 빈도·강도 증가 등
- ※ 기회...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, 고품질·안전 농식품 수요 증가, 휴양·전통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등

□ 주요내용

-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 조류인플루엔자(AI) 방역대책 구축
 - AI 위험지구 가금농장 신규 허가 제한, 기존 농장 이주 지원
 - 반북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및 가금시설 리모델링 투자
-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 적극 추진
 -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, 북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온실, 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등 시범사업 단계적 실시
 - 황폐화된 북한 산림에 시범조림 및 병해 충 방제사업 등 추진
-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대폭 확대
 - 정책자금 금리인하(3.2조 원) 및 변동금리 시범 도입(1.2조 원)
 - 농촌어르신 공동이용시설(공동생활홈, 작은목욕탕, 공동급식시설) 76개소 신설
-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 -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은 발농업경쟁력 제고대책,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축산업 보완대책 중심으로 개방화 극복 노력
-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농정과정 접근방법 전환
 - 스마트 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정상적인 관행 정상화
 -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자체·경영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조
- 농업계의 총체적 역량 결집 강조
 -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2014년,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중요, 위기 극복 위한 농업계의 총체적 역량 결집 강조

☞ 정책브리핑

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발표

□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기본방향

- [3대 추진전략9대 과제와 함께 통일시대 준비] 정부, 국민행복시대 구현 위해 ‘경제혁신 3개년 계획’ 발표(2.25일)
 - (추진배경) 비정상적 관행으로 경제 효율성 및 역동성 저하, 수출·내수, 대기업·중소기업, 제조업·서비스업 간 불균형,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해결할 과제 산적

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기본방향



☞ 정책브리핑

□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주요 실행과제

- [3대 핵심전략 추진 강화] “기초가 튼튼한 경제”, “역동적인 혁신경제”, “내수수출 균형경제” 등 3대 핵심전략 추진 강화

■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개요 ■

구 분	주 요 내 용	
기초가 튼튼한 경제	1. 공공부문 개혁	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, 부채감축, 비리척결과 함께 생산성 제고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
	2.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	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의 확실한 정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,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
역동적인 혁신경제	3. 사회안전망 강화	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<주요 실행과제> ◆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...부당 발주취소 등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지급, 거래단절 우려해 신고 어려운 중소기업 보호 강화 ◆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...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지속해 권리금 회수,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 도입 ◆고용보험 대상 확대...보험모집안·학습지교사, 골프장 캐디, 레미콘운전자, 택배기사 등 6개 직종 및 예술인에 확대, 자영업자에는 가업지원요건 완화
	4. 창조경제 구현	「창업-성장-회수-재도전」의 전 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
내수수출 균형경제	5. 미래대비 투자	R&D투자 확대,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,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등
	6. 해외진출 촉진	F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·플랜트와 컨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 <주요 실행과제> ◆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...전국 17개 광역사도에 설치해 경제 활성화, 창업자나 투자자 등이 서로 교류협업할 환경 ◆벤처창업 활성화...창업자 1만3,000명 육성에 4조328억 원 지원, 청년창업에인절투자 펀드에 집중 투자 ◆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...정부 40% 외국투자자 60% 투자로 2,000억 원, 외국인의 시각으로 유망한 국내 기업 발굴
통일시대 준비	7. 내수(소비)기반 확대	가계부채, 전세값 상승 등 내수(소비) 제약요인 최우선적으로 해결
	8. 투자여건 확충	규제혁파, 5대 유망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 투자 걸림돌 제거 등
	9. 청년·여성 고용률 제고	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 해소, 여성이 경력단절 방지 <주요 실행과제> ◆규제 자동효력 상실제 도입확대...규제일몰제 이후에도 존치되는 규제 폐지, 올 상반기 중 적용범위방법 등 관련 지침 마련 ◆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...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고졸에 연 1,200만 원 한도,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비과세 ◆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...육아임산축산 위해 전일제 근로자에 부여,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는 시간선택제 지원
	◆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...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, 통일된 한반도의 청사진 제시	

☞ 정책브리핑

□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 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모습

- [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 달성]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져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국민 삶도 크게 변화
- (목표) 고용률 70% 달성, 4%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,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

■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■



자료 : 기획재정부(2014.2.25.)

연구지원 2013년 축종별 등급판정통계분석 결과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2014.2.26)

- [소] 1,069,459두, 전년(967,574두)대비 10.5% 증가
 - ※ 판정두수 추이: ('10) 751천 두 → ('11) 850 → ('12) 968 → ('13) 1,069
 - (품종별) 한우 959,751두(89.7%), 젓소 45,585두(4.3%), 육우 64,123두(6.0%)
 - ※ 한우점유율: ('04) 56.2% → ('10) 80.2 → ('12) 87.1 → ('13) 89.7
 - (한우 판정두수) 암컷 510,584두(53.2%), 수컷 27,703두(2.9%), 거세 421,464두(43.9%)
 - ※ 한우 암컷 비율(%): ('04) 38.2% → ('08) 44.8 → ('10) 43.7 → ('12) 51.9 → ('13) 53.2
- [한우거세 1+등급 이상 출현율] 전남(52.1%), 전북(50.5%), 경기(50.1%) 순
 - ※ 전국 시·도 평균 출하 24,000두 이상 지역 대상으로 분석
- [한우 전체 1+등급 이상 출현율] 30.2%, 전년대비 0.7%p 증가
 - ※ 등급별 출현율: 1++등급(9.2%), 1+(21.0), 1(31.0), 2(27.1), 3(11.2)
- [한우 거세 1+등급 이상 출현율] 49.8%, 전년대비 동일
 - ※ 등급별 출현율: 1++등급(17.1%), 1+(32.7), 1(33.9), 2(15.0), 3(1.2)
- [돼지] 16,107,821두, 전년(14,018,093두)대비 14.9% 증가
 - ※ 판정두수 추이: ('10) 14,589천 두 → ('11) 10,819 → ('12) 14,018 → ('13) 16,108
- [닭고기] 77,765,959수, 전년대비 17.2% 상승
 - ※ 판정수수 추이: ('10) 45,969천 수 → ('11) 52,547 → ('12) 66,339 → ('13) 77,766
 - ※ 닭고기 등급판정 결과: 1+등급(9.6%), 1등급(84.1%), 2등급(6.3%) 출현
- [계란] 858,048,113개, 전년대비 20.3% 상승
 - ※ 판정개수 추이: ('10) 521,055천 개 → ('11) 588,119 → ('12) 713,025 → ('13) 858,048
 - ※ 계란 등급판정 결과: 1+등급(91.7%), 1등급(8.2%), 2등급(0.1%) 출현
- [오리고기] 6,116,593수, 2012.7월 본 사업 시작
- [말] 333두, 전년대비 141두 증가,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
- [꿀] 꿀 소비 활성화와 양봉산업 발전 위해 ' 13.12월부터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 중
 - ※ 등급 종류: 1+등급(Premium), 1등급(Special), 2등급(Standard)

특별기획 2014 미국 농업법(Farm Bill)

미국 농업법 목적 및 제정절차

- [입법목적] 대략 5년마다 미국 농업 및 식품에 대한 정책 수립
 - (개별적 사안) 법안이 되기 어려운 일련의 농업 및 식품에 대한 정책들을 집합적으로 정리하여 입법화 과정을 통해 법안으로 구체화시킴에 따라, 이해집단들 간 갈등을 줄이고,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- (입안) 대략 5년 주기로 영구법인 1948년 농업법을 개정하는 형태
- [제정절차] 양원 합의를 통한 제정
 - ① 양원(상원, 하원) 농업위원회 가결 → ② 양원 개별법안 마련(본회 가결) → ③ 양원 합의안으로 단일안 결정 → ④ 대통령 서명 후 제정

2014 미국 농업법 입법배경 및 과정

- [입법배경]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 상황에서 농가경제는 양호함에 따라 불필요한 농업제정을 감축시키는 농정개혁 요구
 - (심각한 재정적자) 2010년 말 미국의 국가채무는 9조 달러(GDP의 62.1%)를 넘어 재정지출 삭감이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재정책임상 개혁위원회는 국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해 농업분야에 제정 지출 감축 제안
 - (농가경제 양호) 2010년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2010년 순농가소득은 과거 10년 평균대비 26% 상승, 부채비율은 약 12%로 역사상 최저수준 기록
- [입법과정] 농가소득 안전망 등 현안에 대한 양원의 견해차이로 합의안에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 겨우 합의안 도출, 미 대통령 서명(' 14.2.7.) 이후 2014 농업법 발효
 - (교착상태 지속) 2012.9월 시한이 만료됐으나 푸드스탬프 예산, 재정적자 감축 방안 등 쟁점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 정치권 협상이 계속 교착상태 지속
 - ※ 시한 만료 전인 2011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되었으나 무려 4년간 정쟁 거듭
 - (평가) 오바마 미국 대통령, “이번 농업법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농촌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차별성이 반영되었다” 평가

특별기획

2014 미국 농업법 입법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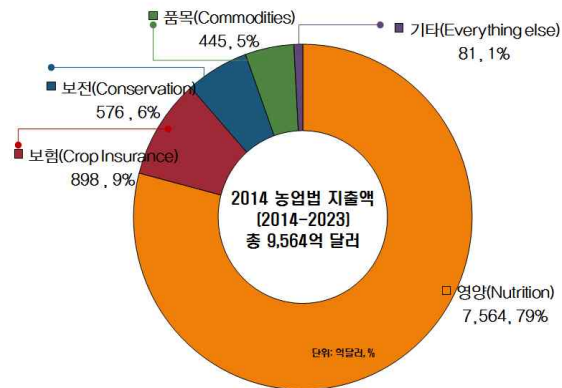
양원 농업위원회 (Committee)		양원 개별법안 마련 (Initial Passage)		양원 합의안으로 단일화 (Conference Agreement)			법 제정 (Public Law)
상원 가결	하원 가결	상원 가결	하원 가결	단일안 보고	상원 가결	하원 가결	대통령 서명
2012.4.26.	2013.6.13.	2012.6.21.	2013.7.11.	2014.1.27.	2014.2.4.	2014.1.19.	2014.2.7.

주: (2014.1.29.) 하원총회(찬성 251, 반대 161) 가결 / (2014.2.4.) 상원총회(찬성 68, 반대 32) 가결

2014 미국 농업법 개요 및 주요내용

1) 개요

- [명칭] Agricultural Act of 2014
- [적용기간] 2014 ~ 2018년
- [소요예산] 10년간 9,564억 달러
 - (항목별) **영양(Nutrition)부문 지출이 7,564억 달러(79%)**로 농업 총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, 작물보험(Crop Insurance), 보전(Conservation), 품목정책(Commodities) 부문 지출이 나머지 부분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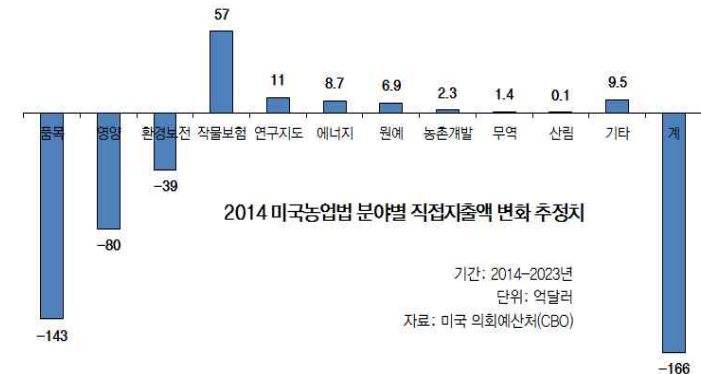
- [중점사항] ① 농업 프로그램 개혁, ② 재정 적자 완화, ③ 농업경제 활성화
 -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**연방지출 절약**(약 166억 달러*)
 - ※ 미국 의회 예산처(CBO) 기준, 농업위원회는 230억 달러 추정
 - **농업프로그램 개선**을 통한 농업정책비용절감

특별기획

- 1996년 복지개혁 이후로 **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**(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, SNAP) 처음 **개혁 단행**
-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약 **100여개의 프로그램 폐지 및 통합**
- 업무역량을 높이는 기반시설투자로 **일자리 창출에 대한 규제 완화**
-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법의 **확실성 부여**

2) 주요내용

- [예산삭감] 미국 의회예산처(CBO), 10년간(2014-23년) 농업재정 지출 삭감액 166억 달러 추정
 - (분야별) **품목, 영양, 환경보전 분야는 감축**한 반면, **작물보험, 연구지도, 에너지, 원예 분야는 증액**
 - ※ 예산감축: 품목(143억 달러), 영양(80), 환경보전(39)
 - ※ 예산증액: 작물보험(57억 달러), 연구지도(11), 에너지(8.7), 원예(6.9), 농촌개발(2.3), 무역(1.4), 산림(0.1), 기타(9.5)



- [직불제 폐지와 위험관리(안전망) 강화] 고정직불제 완전 폐지, 가격보전직불제(CCP)수입보전직불제(ACRE)는 폐지 후 각각 가격손실보전제(Price Loss Coverage, PLC)와 농업위험관리제(Agri. Risk Coverage, ARC)로 대체하고, 작물보험 강화
 - (**고정직불제 폐지**) ① 최근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음에도 고정적 농가지원 지속, ② 국제 농산물 무역 시 감축대상보조로서 무역 분쟁의 원인 제공 등의 이유로 일찍부터 폐지 논의
 - ※ **고정직불제 폐지에 따라 10년간 408억 달러 감축효과 발생**

㉔ 특별기획

- (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가 선택지 확대) 가격손실보전제, 지역단위 ARC, 농가 단위 ARC 중 한 가지 선택 가능
 - (가격보전직불제 → 가격손실보전제*) 15억 달러 정도였던 가격보전직불제 폐지하고 가격하락보상제 도입, 130억 달러 배정
 - ※ PLC: 당해연도 작목별 전국 평균시장가격이 참조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발동, 기본적으로 가격보전직불제와 같으나 목표가격에 해당하는 참조가격이 근래의 시장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대폭 인상
 - (수입보전직불제 → 농업위험관리제*) 47억 달러 정도였던 수입보전직불제 폐지하고 농업위험보상제 도입, 140억 달러 할당
 - ※ ARC: 지역(county)단위와 농가단위 방식, (지역단위 ARC) 개별농가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지역평균 실제 작물수입이 해당 지역의 수입보장액보다 낮을 때 발동, 수입보전직불제와 동일, (농가단위 ARC) 당해 연도 해당 농가의 품목정책 대상 작목 전체 수입이 보장수입에 못 미칠 경우 지급되는 제도
 - (작물보험 강화) 10년간 57억 달러의 예산 증액, 기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경미한 손실(shallow loss)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원선택권(SCO)제 도입
- [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(SNAP) 예산 감축] 10년간 80억 달러 감축, 예산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
- (부정수급 및 남용 목적 지원 중단)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재원 절감 위해 부정수급 및 남용 목적의 지원 중단
 - ※ 농무성의 영양지원 프로그램 가입 홍보활동 금지와 수급대상자 제한(불법이민자, 복권당첨자, 일반대학생 등)

※ 참고문헌
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_World Trade & Policy Research_미국 2013 농업법 분석
- GSNI_시선집중 제 174호_미국 농업법 2014,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_세계농업 162호_미국, 오바마 대통령 2014 Farm Bill 서명
- Congressional Budget Office_H.R. 2642, Agricultural Act Of 2014(2014.1.28.)
- Politico_Press Releases_Farm bill signed: USDA on the clock
- <http://agriculture.house.gov/>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
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